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2005. 2. 8 제정

2011. 12. 10 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패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국부패학회보 (Journal of Korean Corruption Studies Review)"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본 규정에 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학회지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본 학회내에 한국부패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 3 조 (구성)

- (1) 위원회는 각 1인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 (3)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4) 위원은 덕망과 연구실적과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제청으로 학회장이 임명한다.
- (5)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6) 상임이사회의 편집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 4 조 (의무, 권한)

- (1) 위원회는 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전공영역 정의), 투고논문 심사위원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중재,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 (2) 위원은 학회지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3)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학회 명예와 위상을 해할 우려가 있는 회원의 학회활동(이 경우 투고논문과 관련하여 타인의 연구내용을 무단전제, 기 발표한 논문이나 타 학회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본학회에 건의하여 회원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3장 학회지 투고

제 5 조 (투고자격)

본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공동 논문인 경우 본학회 회원이 아닌

자와 공동투고 할 수 있다.

제 6 조 (투고기준 및 시기)

- (1)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투고원고 접수일은 해당원고가 한국부패학회지에 도착한 일자로 한다(이메일의 경우 이메일 도착일자로 한다).
- (2) 연구논문의 경우 본 학회지외의 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연구발표를 위한 가인쇄 또는 발표중 유인물의 형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3) 원고는 전자우편(홈페이지 업로드) 혹은 출력 인쇄본과 디스켓으로 제출하며 심사료 납부가 증명될 때 투고로 인정된다.
- (4) 연구논문의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워드프로세서로 더블 스페이스 40자 25행 20매 내외로 한다. 단 원고지 4매(8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원고지 3매(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5) 국문외 원고는 1매당 1행 12~15단어, 21행으로 하고 매수는 20매 이내로 한다.

제 7 조 (심사료 및 게재료)

- (1)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최종 “게재불가”판정이 결정되더라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심사료를 지정된 기일에 납부한 자에 한해 심사를 진행한다.
- (2) 투고논문이 게재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자의 논문은 게재하지 않고 다음 호에 기회를 부여 한다.
- (3) 투고논문의 게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4장 투고논문의 심사

제 8 조 (투고논문의 심사)

- (1)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을 전공영역을 기초로 동일전공영역에서 상당한 연구실적을 쌓고 덕망이 있는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하며, 그 심사결과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2)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하여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능, 조건부게재, 재심, 게재불가의 네가지로 한다. 단, 심사위원의 조건부게재, 재심 및 게재불가 판정에는 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하며, 조건부게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이 제시한 조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 (3)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심사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 (4)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각각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5)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 심사료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6) 본 학회의 심사는 재심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 (규정의 개폐 및 수정)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회의 의결로 개폐 및 수정 할 수 있다.

제 2 조 (학회지 간행회수)

본 학회의 학회지의 발행은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 3 조 (학회지 전자간행)

본 학회지는 본 학회 홈페이지에 그 원문을 PDF 파일로 게재한다.

제 4 조 (효력의 발생)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한국부패학회 논문심사규정

2005.02.08. 제정

2007.12.07. 개정

2011.12.10. 개정

2013.10.0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학회(이하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우리 학회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논문(이하 원고)의 심사와 게재 협의 확정, 그리고 학회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투고규정) 『한국부패학회보』에 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편집대표에게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원고를 심사한다. 신청인의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②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대학교의 전임교원
2. 박사학위 소지자
3.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권위를 인정한 자

③ 심사위원은 우리 학회 윤리 연구윤리규정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사기준) 원고의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내용전개의 창의성, 학술성과 논리성
2. 독창성
3. 정확한 서술과 각주 및 본문주, 참고문헌의 활용도
4. 연구의 기여도

제6조 (게재결정) ① 해당 편집대표는 개별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이 유와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직권으로 게재유보를 결정할 수 있다. 게재유보결정은 신청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한 이후에도 할 수 있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우리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원고가 원고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그 수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③ 게재확정된 원고 또는 게재확정통보된 원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결정에 대한 이의) 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를 게재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

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편집대표에게 서면(전자메일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대표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편집대표는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5.2.8. 제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07.12.7. 개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1.12.10. 개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10.04. 개정하고 시행한다.

학회지 논문 발행 규정

2005. 2. 8 제정

2011. 12. 10 개정

편집위원회

1. 기고논문 취합

- 1) 반부패와 관련된 모든 학문분야의 논문과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신뢰성 제고에 관한 학술논문을 핵심 주제로 한다.
- 2) 심사비(60,000원)를 온라인으로 납부한 시점에서 논문심사절차를 개시한다.
(계좌번호 : 866401-04-037324(국민은행),예금주: 한국부패학회)
- 3) 연구논문의 전체분량은 워드 프로세서인 경우에는 더블스페이스 40자 25행 20매 내외로 한다.
- 4)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위하여 심사를 의뢰한 논문이나 혹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과 중복 된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 5) 원고는 회원이 기고 할 수 있으며, 공동 저자의 경우 1인 이상 회원이면 가능하다.

2. 심사위원 추천

- 1) 수시로 들어온 원고를 일주일 단위로 취합하여 편집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 한다.
- 2) 일주일 동안 추천받은 명단을 취합·정리한 후 편집이사에게 보내드려 최종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3) 심사의뢰 후 30일이 지나도 심사자가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이사는 직권으로 그 심사자를 편집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 교체한다.

3. 논문심사

- 1) 초심논문심사는 초심과 재심으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 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윤리 강령, 투고된 논문의 원고, 기고논문 심사위원 위촉문, 심사결과통보서를 전송한다.
 - ② 심사기한은 원고를 전송한 날로부터 2주정도의 시간을 드린다.
 - ③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은 초심에서 게재(○), 수정게재(△), 게재불가(×)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재심에서는 게재가, 불가의 판정만 한다.

판정기준	심사기준			비고
게재가능	○	○	○	게재 확정
	○	○	△	게재 확정
조건부게재	○	○	×	수정을 권장하되 게재 확정
재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이상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게재 가능이면 게재, 새로운 심사자 1인이 게재가능이면 게재
	△	△	×	△에게 재심을 의뢰하여 2인 모두 게재가능이면 게재
게재불가	○	×	×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이면 게재 불가
	△	×	×	
	×	×	×	

- ④ 초심의 경우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모든 심사위원들이 심사평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 ⑤ 저자에게 논문의 판정을 보내기 전 편집이사에게 심사평을 보내어 확인 후 발송한다.

- ⑥ 심사평은 저자에게 전송하고, 원본파일은 편집간사가 출력 및 저장하여 보관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재심

- ① 재심원고가 도착하면 초심에서 수정게재로 판정하신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로 사전에 연락 하고 재심원고를 전송한다.
- ② 재심의 경우 심사기한은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일로 한다.
- ③ 재심의 경우는 게재가, 게재불가의 판정만을 하며, 불가판정의 경우 반드시 심사평을 받는다.
- ④ 기타 유의사항 및 논문의 판정은 초심의 경우와 동일하다.

4. 논문심사 결과보고

- 1)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이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2)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논문기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3) 편집이사는 심사결과와 논문발간에 대한 사항을 회장과 편집위원전원에게 보고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논문을 발간한다.

5. 최종원고 취합 및 발간

- 1) 최종원고를 출판사로 넘겨 조판작업을 거쳐 저자들에게 발송되어(출판사에서 담당), 저자교정한다.

6. 학회보발간 예정일자

- 제1호 : 3월 31일 (원고 마감 : 1월 31일)
- 제2호 : 6월 30일 (원고 마감 : 4월 30일)
- 제3호 : 9월 30일 (원고 마감 : 7월 31일)
- 제4호 : 12월 31일 (원고 마감 : 10월 31일)

7. 기타사항

- 1) 원고 제출 시 심사료 (6만원)을 기간내에 수납하여야 심사 진행을 한다.
- 2)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으로서 그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30만원의 게재료를 수납하고 일반논문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게재료를 수납하여야 게재한다.
- 3) 모든 심사절차가 종료되면 심사자에게 심사료를 지급한다(초심 2만원, 재심 1만원)
- 4) 편집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 5)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이월게재 할 수 있다.
- 6)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한다.

한국부패학회보 투고 규정

2005. 2. 8 제정

2009. 1. 23 개정

편집위원회

1.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아래 한글”로 A4용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세부적 지침은 다음과 같다

편집용지			문단여백		
용지여백	위쪽	30	여백	왼쪽	0
	아래쪽	30		오른쪽	0
	왼쪽	31	간격	줄간격	160
	오른쪽	30		문단위	0
	머리말	12		문단아래	0
	꼬리말	12	첫째줄	들여쓰기	0
	제본	0	정렬	정렬방식	양쪽혼합
				날말간격	0

2. 전체분량은 200자 원고지 125매(25,000자)를 원칙으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200자 원고지 5매(1,000자)당 1만5천원의 인쇄비를 징수한다(한글97, 2002 프로그램에서: 파일-문서정보-문서분량-원고지로 체크).

3. 제목, 저자(국문,영문), 영문초록(원고지 4매 이내(800자 이내)), 주제어(3개 이상, 국문, 영문),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배열한다.

4. 원고지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저자이름(국·영문),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 연락처(직장, 자택),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5. 저자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공동저자는 논문기여도를 고려하여 가나다 순서로 명기한다.

6. 원고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글(漢字)의 형태로 쓰고, 외국학자의 이름은 원어로 쓴다.

7. 원고의 본문주와 참고문헌에서 필자의 글은 공란없이 삭제한다.

8. 게재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 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한다.

9. 학회보 발간일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다

제1호 : 3월 31일 (원고 마감 : 1월 31일)

제2호 : 6월 30일 (원고 마감 : 4월 30일)

제3호 : 9월 30일 (원고 마감 : 7월 31일)

제4호 : 12월 31일 (원고 마감 : 10월 31일)

10. 제출된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하여 게재확정통보를 받게 되면 학회가 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을 학회에서 갖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1. 참고문헌, 본문주, 기타 등은 한국행정학회(KAPA) 논문작성요령을 따른다.

참고 : 한국행정학회 참고문헌, 본문주, 기타 작성 요령

(이하의 내용은 한국행정학회의 논문작성방법 중 일부를 옮겨놓은 것임)

■ 참고문헌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되 저자의姓을 기준으로 전자는 가나다순으로 후자는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2. 참고문헌은 다음과 같이 저자, 출판 년도, 제목, 출판사항의 순서로 기재한다.

예 : 감사원법. (개정 1995. 1. 5, 법률 제4937호).

「'93과학기술연감」. (1994). 서울: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처. (1987). 「과학기술행정 20년사」. 서울: 과학기술처.

김창준·안병만. (1989).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료행태 비교. 박동서·김광웅(공편), 「의 회와 행정부」, 77-115. 서울: 법문사.

박동서. (1990). 「한국행정론」. 서울: 법문사.

신무섭. (1985). 「한국행정부의 예산안 결정과정에 있어서 점증주의 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병영. (1990). 관료부패는 고질병인가. 「한국일보」, 6. 26: 5.

이종범·김준한·정용덕. (1990). 행정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 학보」, 24(1): 367-426.

「조선일보」. (1993). 통상전담기구 만들어야. 1. 30: 3

Brown, Richard E., Gallagher, Thomas P., & Williams, Meredith C. (1982). *Auditing Performance in Government: Concepts and Cases*. New York: John Wiley & Sons.

Hempel, Carl G. (1965).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The Free Press; 강선태.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129-130. 서울: 박영사, 1995에서 재인용.

Hwang, Yun-won. (1987).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in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Okun, Arthur M. (1998). 「평등과 효율」, 정용덕(역).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Equality and Efficiency: The Big Tradeoff*.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5.

Perry, James L. & Wise, Lois R. (1990). The Motivational Bases of Public Servi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50(3): 367-426.

Thomas, Kenneth.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urvin D.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Behavior*, 889-935.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

■ 본문주

1. 인용·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참고주(reference notes)는 다음과 같이 본문 중에 괄호를 사용하

여 처리하고, 그 자료의 내역을 정리한 참고문헌(reference list)을 논문의 끝부분에 첨부한다.

1) 자료가 문장의 일부로 언급되는 경우

예: Okun(1975/1988: 61-69)을 중심으로.....; 김창준·안병만 (1990: 79)은.....;
Perry&Wise(1990)의 분류에 따라.....;.....Hwang(1987)과 신무섭(1985)을 들 수 있다;
Brown외(1982)의 연구에서도.....; 감사원법 제2조 제1항에서는 ...; 「'93과학기술연감」
(1994: 35)에 제시된...

2) 자료가 괄호 속에 분리되어 언급되는 경우

예:라고 볼 수 있다(감사원법 §2①; 「조선일보」, 1993; 안병영, 1990; 과학기술처,
1987)...을 제시하였다
(예: 이종범 외, 1990; Thomas, 1976: 900; Hempel, 1965: 258-264)

2. 본문의 내용에 설명을 부연하기 위한 내용주(content notes)는 해당 부분의 오른쪽 위에 논문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기고(예: ...하였다.1))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처리한다.

■ 기 타

1. 목차의 계층을 나타내는 기호체계는 1, 1. 1), (1), ①의 순서를 따른다.
2. 표나 그림의 제목은 각각 논문의 전편을 통해서 일련번호를 매겨(예: <표 1>, <그림 1>) 표나 그림의 윗부분에 쓰고,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본 요령 본문자 1-1)의 양식에 따라 아랫부분에 밝힌다[예: 자료: Thomas(1975: 900)의 재구성].
3. 표나 그림에 대한 주는 개별주(a), b), c)의 기호 사용; 확률주인 경우에는 * $p < .05$, ** $p < .01$, *** $p < .001$, 일반주('주:'로 표시하고 기재)의 순으로 자료 출처의 윗부분에 달아 준다(즉, 표나 그림의 하단에 개별주, 일반주, 자료의 순서가 되도록 배열한다).
4.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르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적는다.
5. 여기에 제시된 주와 참고문헌의 작성양식은 1986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서 발행한 *Publication Manual* (제3판)을 표준으로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한 것이다. 본 요령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APA Manual을 따른다.

한국부패학회 연구윤리·진실성확보를 위한 규정

제정: 2007.10.20.

개정: 2013.10.0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패학회(이하 “학회”라 함) 학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우리 학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나 우리 학회 등의 인지로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⑤ “전문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조사자와 사제지간이거나 연구를 공동으로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2. 피조사자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 ② 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0조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연구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에게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제보자의 권리보호) ①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실명 제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회장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회장은 제보자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④ 제보자는 회장에게 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의2(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회장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피조사자는 회장에게 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행위 검증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② 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7조(판정) ① 판정은 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회장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10.20. 제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3.10.04. 개정하고 시행한다.

한국부패학회 윤리헌장위반에 관한 처리 규정

제정: 2007.10.20.

개정: 2013.10.04.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부패학회(이하 “학회”라 함) 학회의 윤리헌장에 위반의 제소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를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① 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윤리헌장에 위반된 사항을 처리하며,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는 상임이사회에 한다.

② 상임이사회에 윤리헌장 위반을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학회 상임이사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① 윤리헌장 위반으로 상임이사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윤리헌장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윤리헌장 위반으로 상임이사회에 제소된 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상임이사회 윤리헌장 운영) ① 상임이사회는 윤리헌장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의 윤리헌장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내용을 확정한다.

③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상임이사회 결정에 의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07.10.20. 제정하고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3.10.04. 개정하고 시행한다.